

## 법령 I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점 관리해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 중 소관 총리령·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
- ㄴ.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
- ㄷ.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게 물자의 사용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 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비축물자의 사용에 관한 권한

- ① ㄱ, ㄹ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④ 비상대비교육 참여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시·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에 해당한다.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로부터 통보된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③ 시·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④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인력자원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인 19세의 甲은 인력자원에 해당한다.
- ② 외국의 법령에 따른 기술 면허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인 60세의 乙은 인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인 30세의 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가 아닌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인력자원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자에 해당한다.
- ④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40세의 丁은 인력자원에 해당한다.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물자의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정부 비축 물자에 대하여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② 국무총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정부 비축 및 업체 비축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를 요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정부 비축 및 업체 비축 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6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비상시 재난의 긴급복구업체, 자원수송업체 및 방위산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이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 지정업체에 대한 준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도산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의 장에게 지정해제 사실을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중점 관리해야 할 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그 업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다.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험제품 생산훈련의 경우 훈련 기간은 연(年) 7일을 초과할 수 있다.
- ㄴ. 훈련 참가자의 인도·인수와 관련하여, 인도·인수관은 훈련에 참가한 사람 중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ㄷ.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인수하게 할 수도 있다.
- ㄹ.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통지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훈련통지서에 적힌 바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그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아닌 동거가족이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②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를 받은 인력훈련통지서 교부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물적자원의 훈련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훈련대상물자인 자기 소유의 비료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에서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라면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사유가 되지 않는다.
- ④ 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훈련대상자의 거주지가 훈련대상물자 소유자의 거주지 또는 업체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는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 결과를 지체 없이 훈련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10.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비상대비 훈련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장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 ③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 ④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의 임직원

문 1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으로 인한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하거나 의료지원을 한다.
- ②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이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 건물의 사용료 및 멸실 대가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한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련 절차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④ 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의 소속 기관의 장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 1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 및 임무가 적힌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국무총리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된 물자의 비축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비축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비상대비책임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외한다)은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인력자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조사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 1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 훈련의 실시명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1)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의 실시명령은 ( ㉠ )이/가 그 훈련의 방법·기간 등에 대하여 ( ㉡ )의 승인을 받아서 발령한다.
- (2) (1)에 따른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 ㉢ )이/가 ( ㉣ )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u>㉠</u>	<u>㉡</u>	<u>㉢</u>	<u>㉣</u>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② 국무총리	대통령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③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④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그 분과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이며, 재난구호 대책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다.
- 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2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 ㄷ.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민방위협의회 관장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ㄹ.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각 분과위원회에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는데, 이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방위대에 대한 특별검열을 실시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비상대피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의 외국어 병행 표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지하 양수시설(揚水施設)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의 점검 주기·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민방위대는 기본적으로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하며, 대체역 중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민방위대 조직에 포함된다.
- ㄴ.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는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방위대에서 제외된다.
- ㄷ. 여성은 지원하여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으며,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ㄹ.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생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장·군수·구청장이 둘 이상의 직장 민방위대를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 ㄴ.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 ㄷ. 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하나, 민방위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편제 순서에 따라 간부대원이 지휘권을 행사한다.
- ㄹ.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19. 민방위기본법령상 ㉠~㉤에 들어갈 것을 빠른 날짜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확정된 집행계획을 통보받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 ㉠ )까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세부 집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월 ▲▲일부터 ( ㉡ )까지 읍·면·동민방위협의회 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시·도계획을 매년 ( ㉢ )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월 ■■■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연도 ( ㉣ )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문 20.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민방위대 동원 공고와 관련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ㄴ.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관혼상제의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 ㄷ.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해당 기계 및 기구의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0분의 20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 ㄹ. 동원 명령자는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ㄴ.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ㄷ.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 ㄹ.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24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 ㅁ.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려면 소속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하려면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	X	○	X	○
②	X	○	X	○	X
③	○	X	X	○	X
④	X	○	○	X	○

문 22.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사(驛舍),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은 경보전과 대상 건축물에 포함된다.
- ④ 지방환경청장은 댐 등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문 23. 민방위기본법령상 등화관제의 대상 및 요령의 연결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만, 건축물·차량·선박·항공기 및 지하 시설 등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종류	경계관제	공습관제
ㄱ	특수시설 옥내등	병원의 중환자실	차광	소등 또는 완전 차광으로 빛이 새는 것을 방지
ㄴ	일반교통 관제등화	보행자 신호등	평상시와 같음	소등
ㄷ	철도관계 등화	대기실	소등. 다만, 최소 필요등은 차광할 수 있음	소등
ㄹ	일반 옥외등	소방관서 표지등	소등	소등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문 24. 민방위기본법령상 법정형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고르면?

- ①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 ③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한 민방위 대장
- ④ 전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

문 25.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시험공부 모임 친구들의 민방위 동원 관련 보상금에 대한 대화이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을 모두 고르면?

A: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사망하면 사망 보상금은 얼마지?

甲: 사망 보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월평균임금총액은 사망한 해의 전년도에 것을 기준으로 해.

A: 만약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고 장애 등급이 4급이라면 장애 보상금을 얼마 받게 되지?

乙: 장애 등급 4급의 장애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의 7/12이야.

A: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무엇이지?

丙: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야. 다만 그 지급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어.

A: 읍·면·동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한 경우 대원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면 재해 보상금은 누가 부담하지?

丁: 재해 보상금은 시·군·구가 부담해.

- ① 甲, 乙                      ② 甲, 丁                      ③ 乙, 丙                      ④ 丙, 丁

##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26. 예비군법령상 예비군대원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장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해당 직장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역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이며 본인의 신청으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 ④ 지원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된다.

문 27.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단위의 특전예비군지역대로 편성할 수 있다.
- ㄴ.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에 대하여 대대의 경우 401명 이상 1천700명 이하로 편성한다.
- ㄷ.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해당 항구·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와 승선원으로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 ㄹ.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한 경우 같은 항구·포구에 여러 개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한다.
- ㅁ.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쉽게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의 관리·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ㄹ, ㅁ



문 30.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예비군대원의 동원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확성기·게시판·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동원명령의 내용을 예비군대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 ㄴ. 수임군부대의 장과 수탁경찰서장은 「예비군법」 제2조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 외의 다른 사유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다.
- ㄷ. 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예비군부대의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수탁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ㄹ.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전화, 확성기, 사이렌,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1.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 보류 대상자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회의원
- ㄴ.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ㄷ. 군수
- ㄹ. 교도관
- ㅁ. 지방의회의원
- ㅂ. 지방공무원인 특별시의 부시장

- ① ㄱ, ㅁ                      ② ㄷ, ㅂ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ㅂ



문 32.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원명령 발령 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중인 예비군대원 甲이 수임군부대의 장 乙로부터 전화로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에 응하라는 소집통보를 받았다면, 소집통지를 받은 甲은 동원명령 발령 후 6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 ㄴ. 예비군대원 甲이 출타 중인 관계로 수임군부대의 장 乙로부터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丙(甲과 같은 세대 내의 성년인 누나)은 甲에게 직접 소집통지서 원본을 전달하여야만 한다.
- ㄷ. 수임군부대의 장 乙이 예비군대원 甲에게 전자문서로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려면 미리 甲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20일 전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해 훈련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 ㄹ. 수임군부대의 장 乙은 예비군대원 甲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3. 예비군법령상 예비군표지장의 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휘장은 예비군제복의 상의 좌측 호주머니 단추부분에 부착한다.
- ② 예비군제복을 착용하는 경우, 흉장은 예비군제복의 상의 이름표 상단 중앙에 부착한다.
- ③ 근무복을 착용하는 경우, 모표는 모표의 중앙이 근무모 앞면의 봉제선과 일치되게 부착한다.
- ④ 견장은 예비군제복 및 점퍼의 상의 어깨선 양측에 월계수 잎이 목 부분으로 향하도록 부착한다.

문 34. 예비군법령상 재해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군대원이 훈련 중 입은 중상으로 인해 2021. 6. 5. 민간의료시설에 입원한 상태로 750일 동안 치료받은 후 퇴원하였고, 그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2023. 7. 5.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였다면 7,500만 원에 해당하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전년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이며, 최근 5년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예비군대원이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 육군참모총장이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관할 군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에게 휴업 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때 육군참모총장은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에게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재해보상금 중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애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한다.

문 35. 예비군법령상 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방위협의회는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양양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 ②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의 위원은 산업단지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關係官), 그 밖에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체의 대표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문 36.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적(敵) 1개 소대가 X도 Y시 A마을에 침투하였고, 이에 수임군부대의 장은 해당 지역의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령하였다. 그 후 A마을에 침투한 적은 모두 소멸되었다.

한편 동원명령 및 적 소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 (1) 동원 대상이었던 예비군대원 甲은 동원명령을 받을 당시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서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2) 동원된 예비군대원 乙은 적을 소멸하기 위하여 A마을로 출동하였다.
- (3) 동원된 예비군대원 丙은 A마을에서 전투에 준하는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
- (4) 동원된 예비군대원 丁이 A마을에 침투한 적을 고립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에 지장을 주는 주민 戊 소유의 돈사(豚舍)를 발견하였고, 丁은 이러한 사실을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였다.

— <보 기> —

- ㄱ. 甲은 자신이 원할 경우 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 ㄴ. 출동한 乙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적을 소멸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ㄷ. 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상군경(公傷軍警)에 해당하는 보상 대상자가 된다.
-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적을 고립시키기 위하여 戊 소유의 돈사를 제거하는 방법 이외에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여 돈사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戊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37. 예비군법령상 징역형의 상한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 ㄱ. 甲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당시 실제 거주하는 주소인 X시 Y동 112번지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X시 Y동 210번지로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 ㄴ. X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乙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자 그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였다.
- ㄷ. 수탁경찰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A마을에 무장폭도가 침투하자 그 무장폭도를 체포하기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조명(照明)의 제한과 관련된 긴급조치를 그 내용·기간·구역 등을 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조치의 대상자인 마을 주민 丙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ㄹ. 동원명령을 받은 丁은 재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를 사유로 하여 동원을 연기하였다.

-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ㄴ > ㄹ > ㄱ > ㄷ  
 ③ ㄷ > ㄱ > ㄴ > ㄹ      ④ ㄹ > ㄷ > ㄱ > 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이 명시적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난 및 사고의 예방사업이 아닌 것은?

- 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 ②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른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사업
- ③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
- ④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문 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효율성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에서 추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내용을 다음 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ㅁ.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1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X	X	○	X	○
②	X	○	X	○	X
③	○	X	X	X	○
④	○	X	○	X	○

문 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부합동점검단의 안전 점검 결과와 조치 결과를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ㄴ.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ㄷ.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43. 다음 사례에서 ㉠~㉣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X도 Y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Y시 소방서장 甲은 재난대응활동 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 수단 확보의 응급조치를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乙은 위험수준을 판단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 ㉢Y시 시장 丙은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초고속인터넷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조치를 요청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丁은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조치를 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문 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이 시장으로 있는 Y시 Z지역에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수반한 화재로 인하여 Y시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 발생하였다.

— <보 기> —

- 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Z지역 주민은 피해상황을 甲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 甲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ㄴ. Z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ㄷ. Y시는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기준은 Y시의 조례로 정한다.
- ㄹ. 甲이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요청 조치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보상을 하되, 그 조치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ㅁ.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장관의 건의를 받아 Z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국가와 Y시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Z지역 주민의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문 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상황 등을 기록한 재해연보 또는 재난연감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회의 위원장은 재난원인 조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ㄷ.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의 제공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은 재난안전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
- ㅁ.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경고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문 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문화 진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가가 매년 5월 25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필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행사를 실시한다.
-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고위험이 있는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ㄷ.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국무총리가 제정·고시한 안전관리 현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사업지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